



간호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8부 능선 넘었다”

후반기 국회에서 계속 진행 ...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남아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합니다

전국의 48만 회원과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하여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후 간호법은 한차례 공청회와 모두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되었고,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후 간호법안은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5월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은 간호법안 상정 및 처리 필요성을 언급해주셨습니다.

간호법은 하반기 새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의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간호법 논의를 시작하고,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 씌우면서 지속적인 가

짜뉴스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투쟁을 통해 간호사 부족과 업무 가중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며 40여 차례 국회 앞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우리의 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이뤄냈듯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 멈추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간호법 제정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 마련 … 쟁점 모두 해소

합의된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 간호법 제정안 발의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1년 4월 26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1년 4월 26일 상정됐다. 여야 3당이 함께 간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2021년 8월 24일]

간호법 제정안 공청회 국회에서 열려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2021년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진술인으로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법제 컨설팅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2021년 11월 24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사상 첫 1차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 11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안 관련 쟁점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을 준비토록 요구했고, 정기국회 내에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와 토론이 이뤄졌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2022년 2월 10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2차 심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22년 2월 10일 오전 10시 열렸다. 2021년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계류 상태에 놓였다가 다시 심사가 재개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출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3차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차 회의를 2022년 4월 27일 열어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로 쟁점을 모두 해소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 요청이 수용돼, 보건복지부가 관련단체들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4차 심의 및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2년 5월 9일 4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5월 9일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5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된 간호법안을 의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 하에 간호법 조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간호법안이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안 축소심의를 한 후 통과시켰으며, 간호법안이 여야 합의 하에 가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진퇴장하며 간호법안 축소심의 권한을 포기했으며, 이는 전체회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근거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원문 보기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간호법 알아보기’ 157번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회의록’

[2022년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2022년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어 5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간호법안 안건 상정이 합의되지는 않았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간호법안 상정 및 처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 국회 본회의

간호법 주요 내용

■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간호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

■ 전문간호사의 업무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 근무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 간호사등의 권리 및 책무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

■ 교육전담간호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

■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간호법 가짜뉴스 즉각 중단하라”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 거짓주장으로 국민 혼란 가중시켜

[바로잡기 1]

‘단독처리’ 사실이 아닙니다

1차례 공청회와 4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쟁점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간호법 조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 8시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쟁점을 모두 해소한 간호법 조정안 마련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 만장일치 의결
-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 참석 * 단독처리 아님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조정된 간호법안 통과
• 국민의힘 자진퇴장으로 간호법안 축소심의 권한 포기
• 전체회의 결정 동의를 의미 * 단독처리 아님

[바로잡기 2]

의료전문 변호사의 팩트 체크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NA TV’에 5월 24일 출연한 의료전문 변호사인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현)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간호법과 관련된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주장에 대해 “매우 왜곡된 정보이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을 발생시킨다?

=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

○ 간호법안 단독처리됐다?

=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단독처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다.

[바로잡기 3]

간호법, 타 직역 권익침해 내용 없어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

대한간호협회는 의사협회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의 거짓주장에 대해 “간호법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설명서를 6월 17일 발표했다.

타 직역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다”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그런데도 업무영역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유튜브 영상 13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 13편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YouTube 채널에서
간호법 정보 한눈에

간협 유튜브 채널 [구독] 신청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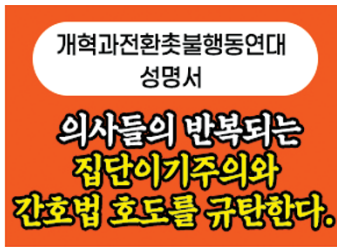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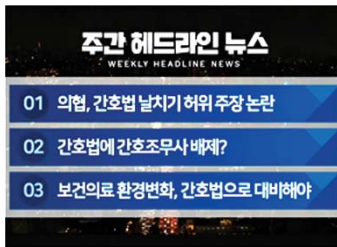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주세요!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한다



간호법 긴급 속보!
사실은 이렇습니다



간호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



간호법,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간호법안, 날치기 법안이 아니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이유!



간호법 제정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간호사는 왜
불법의료 행위자가 되어야 하나요?



의사법으로
간호인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간호법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 시대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

“국민이 함께 나섰다” 지지 확산 … 세계 간호사들도 함께 응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전국에서 800여개 단체 참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연대체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가한 단체가 801개에 이른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올해 4월 20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출범식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가 참가했다. 이어 참가단체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7월 26일 기준 참가단체는 801개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출범식에서 대국민 선언문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서 초고령사회 대비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위해 끝까지 투쟁

간협-보건의료노조 공동 결의대회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022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5월 1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 및 시도간호사회 회원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간호대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해 단합된 힘과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다. 결의대회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제도와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끝까지 연대하며 함께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에서 송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거리를 행진했다.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결의문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쳤다.

WHO “한국 간호법 제정 성공하길 기원”

ICN “간호법 적극 지지-반드시 통과시키자”

‘2022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에서는 국제기구 리더들이 한국의 간호사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보내온 축하 영상이 상영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간호정책수석(Chief Nursing Officer) 엘리자베스 이로(Elizabeth Iro)는 “한국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꼭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앞으로 지구촌이 직면할 예상치 못한 여러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는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놀라운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전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는 간호사를 보호하고, 간호의 미래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은 간호사에 대한 지원이 왜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세상에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

“간호에 투자하고, 간호사의 권리를 존중하자”

국제간호협의회(ICN)는 2022년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5월 12일) 주제를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 : A Voice To Lead)-세계인의 건강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고 간호사의 권리를 존중하자(Invest in nursing and respect rights to secure global hea-

lth)’로 정했다. ICN은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과 헌신으로 맞서왔다”면서 “간호사들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와 보건의료 시스템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정부와 보건의료 시스템은 간호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간호사들을 위한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간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바로 ‘건강 형평성’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출범

간호법 지지 나선 강주성 대표활동가

간호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간호와 돌봄의 가치 바로 세워야

넓은 의료법으로 더 이상 지탱 어려워

간호법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었고, 남은 과제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에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황당하고, 왜곡된 내용이 많아요.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힘은 바로 ‘국민’입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간호와 돌봄의 가치를 설명하고, 간호법을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열고, 국민과 연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저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간호법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남은 과제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에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황당하고, 왜곡된 내용이 많아요.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힘은 바로 ‘국민’입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간호와 돌봄의 가치를 설명하고, 간호법을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열고, 국민과 연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저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간호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챙긴 것은 바로 간호사 여러분 자신입니다. 간호가 병원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간호와 돌봄이 우리 사회에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간호의 가치와 철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전문직의 가치와 철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간호사 여러분, 간호법 제정까지 힘내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간호법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었고,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간호법을 위해 간호사 여러분 모두 힘내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힘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열고, 국민과 연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가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특강을 했으며, 이어 서울시간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쳐온 강주성 대표활동가가 특정 직능단체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 간호법 제정이 처음이다. 간호법은 간호와 돌봄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매우 중요한 법이며, 시대적 요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1999년 39세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골수이식을 했다. 이후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가인하투쟁을 주도했고,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를 지냈다. 건강세상네트워드를 창립해 활동하며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간병시민연대를 만들어 활동했다. ‘대한민국 병원사용설명서’의 저자이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선언문 및 10대 강령을 6월 27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10대 강령 중에는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포함돼 있다. 강주성 대표활동가의 강연과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정리한다.

간호법 제정을 적극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건의료 시민운동을 하며 특정 직능단체 주장에는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호법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간호와 돌봄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간호법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나가서도 간호법에 대한 찬성 발언을 했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도 참여했습니다.”

간호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오랜 시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민운동을 해왔고, 저 역시 환자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간호에 대해 깊이 고민을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간호사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었고요, 노동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죠. 이번에 비로소 ‘간호와 돌봄’에 대한 관점에서 간호법안을 삼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독립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는 관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간호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법은 왜 필요한가, “간호법은 국가 간호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